

오는 15일 이재명 1심 선고

차기 대선 향방 좌우... 與野 ‘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재판 1심 선고
민주당, 실형 시 434억 반환해야
사법정의특위 출범 등으로 대응
한동훈, 재판부에 생중계 촉구
與, 민주당 장외집회 두고 ‘세몰이’

정치권이 오는 15일에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주목하고 있다. 차기 대권 유력 후보인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탐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받았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열흘 앞둔 지난 5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수사를 살펴보는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설득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이 대선 이후 받은 선거 관련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명운이 걸린 선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여당은 재판부에게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9일) 민주당의 두번째 장외집회를 두고 “집회의 명분은 특검 수용 촉구였지만, 실상은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구해보겠다는 ‘세몰이’였다”면서 “국회 안에선 검사 탄핵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밖에선 집회로 대통령과 정권을 압박하며 이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폄하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즉시 가동”

경제·안보회의 주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따른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전에)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됐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해서 서로 논의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외교 협상을 결정해야 되는 대통령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회의 목적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앞으로 계속 점검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가 아닌 지금 당장 준비가 필요하다는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산업과 또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준다”며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것이 기업 경영과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대화를 많이 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해서도 좀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 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은 동맹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니까 미국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서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보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서예진 기자 syj@

與, 이탈표 우려에 ‘제3자 특검’ 목소리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상정 예정
특검 내용 등 與 협상 열려있어
한동훈, 통합·野 대결 중점 둘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관철시키려는 가운데, 일각에서 나오는 ‘제3자 특검’이 여당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제3자 특검은 특검 후보를 특정 정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등 정당과 관계 없는 주체가 추천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을 제외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한다는 방침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표결을 통해 재의결되려면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여당에서 최소8명의 김건희 특검법 찬성표가 나오면 법안은 재의결된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에 여당 의원들이 뿔뿔뿔 무쳐 재의결을 막아왔으나, 그 사이 당정관계가 악화해 재표결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의 이탈표 발생으로 특검안이 통과되느니 야당과 협상해 ‘제3자 특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당 내 최다선이자 친한동훈(친한)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독소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계속 용산과 우리 당이 이 부분에서 제대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면 그 시점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안은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이 배제돼 있으나, 협상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검의 내용, 형식, 독소조항 등에 대해 여당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밝혀왔다.

다만, 한 대표가 당의 분열을 몰고 올 ‘제3자 특검법’ 추진보다 통합과 야당과의 대결에 중점을 둘 거라는 시각도 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회견을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이 말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실에 추가 쇄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보조금 지원 가닥”

‘하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향도 발의

국민의힘이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주무 부처와 조율된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조금 등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통 정부 측에서 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만 투자를 시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영업 이익이 발생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투자 단계에서 선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경쟁국의 대규모 재정 지원 사례처럼,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조율 과정을 임의규정을 통한 재정 지원으로 법안에 담기게 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하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향도 넣어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 반도체특별법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신설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연 의원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안이 핵심인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